

# 美 금리인상 지연에 환율 다시 하락

###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 뚜렷한 신호 부재로... 뉴욕증시 반등·달러 약세로 돌아서

17일(현지시간) 공개된 미국의 7월 연방공개시장위원회(FOMC) 의사록에서 미 금리인상 가능성이 낮아졌다고 나타나자 원·달러 환율이 다시 하루 만에 하락세로 전환했다.

18일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전날보다 3.3원 내린 1105원으로 출발했다. FOMC 의사록이 공개되기 전인 17일 오후만 해도 원·달러 환율은 전일 대비 16.1원이나 뛰어오르며 1108.3원에 거래를 마쳤다.

원·달러 환율은 지난 16일 11.1원이나 급락한 1092.2원을 기록하며 1년 3개월여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지만, 하루 만에 다시 16원이나 뛰어오르며 1100원대를 넘어섰다.

달러화가 다시 오름세를 보인 것은 시장에서 미국의 정책금리 인상 가능성에 대한 기대감이 확산됐기 때문이었다.

16일(현지시간) 윌리엄 더들리 미국 뉴욕 연방준비은행(연준) 총재는 폭스비즈니스와의 인터뷰에서 9월 기준 금리 인상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더들리 총재는 "추가 금리인상이 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시점에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다"며 "시장에서 너무 안일하게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에 더해 데니스 록하트 애플리타 연은 총재까지 "연내 최소한 한 번의 금리인상이 가능하다"는 입장을 밝히면서, 잠잠했던 미국의 조기 금리인상설에 다시 불씨가 붙었다. 그러나 간판 사이 미 연방준비제도 이사회(Fed)가 7월 FOMC 의사록을 공개하자 분위기는 달라졌다.

7월 FOMC 회의에서 위원들간 '기준 금리 인상'을 두고 의견이 엇갈린 가운데, 금리 인상 시기에 대한 신호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KT 갤럭시노트7 공식 출시 KT는 오는 19일 전국 유투 매장 및 직영 온라인 유투샵을 통해 삼성전자의 플래그십 스마트폰 '갤럭시노트7'을 공식 출시한다고 18일 밝혔다.

일부 위원들은 물가 상승률이 연중의 목표치인 2%에 도달할 것이라는 확신이 생기기 전까지 금리 인상 조치를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한 반면, 다른 위원들은 고용, 물가지표가 개선돼 금리를 인상할 환경이 갖춰졌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같은 날 제임스 블러드 세인트루이스 연방준비은행 총재가 워싱턴 강연에서 "연준이 오는 9월 심지어 올해 말까지 금리를 인상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 미국의 금리인상이 빠른 시일 내 이뤄지지 않을 것이라 관측이 퍼져 나갔다.

이에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확대되

면서 미국 뉴욕증시가 반등했고 달러화 가치는 약세로 돌아섰다. 원·달러 환율도 다시 내림세로 돌아서고 있다.

하건형 신한금융투자 연구원은 "7월 FOMC 회의에서 금리 인상에 대한 뚜렷한 신호가 부재한 가운데 달러화는 전일 더들리 총재의 매파적 발언으로 촉발된 강세폭에서 일부 되돌림 현상이 전개됐다"고 말했다.

한편 미 연준 고위 관계자들의 잇따른 '오라가라' 발언이 시장에 혼란만 불러일으키고 있다는 비판론도 형성되고 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연준 당국

관계자 2명이 연내 금리인상에 나설 것이라 시사했음에도 주요 16개국 통화 대비 달러화 시세 척도인 WSI 달러화 지수는 영국의 브렉시트 결정 이후 국민투표에서 가장 낮은 수준을 기록했다"며 "이는 전세계 성장률이 저하돼 Fed가 약속한 정책을 구사할 여력이 제한된다고 시장이 보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Fed 관계자들의 발언을 시장에서는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금리인상과 정책의 재고 등의 정보발신은 시장의 불신을 증폭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뉴시스

## “방사선 피폭량 1/4인 CT 촬영기술 개발”

### 예종철 KAIST 교수 연구팀, 인공지능 기술 ‘딥러닝’ 이용

미래창조과학부는 예종철 한국과학기술원(KAIST) 교수 연구팀이 인공지능 기술인 ‘딥러닝(심화학습)’을 이용해 방사선 피폭량을 현재보다 4분의 1로 줄인 저선량 CT 촬영기술을 개발했다고 18일 밝혔다.

엑스선(X-ray) CT는 암의 조기 진단 및 중재수술에 가장 많이 사용되는 영상장비이지만 촬영시 유발되는 반복적인 방사선 피폭에 대한 위험 방지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반복적인 방사선 피폭은 세포와 조직의 변형을 일으켜 암 등을 유발할 수 있다고 알려져 있다.

미래부에 따르면 저선량 촬영을 시행하면 CT의 피폭 위험성을 낮출 수 있지만 영상 해상도가 크게 저하되고 영상왜곡이 발생해 진단의 효용성이 떨어진다.

현재 영상신호처리기술은 저선량 CT상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영상 복원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다. 하지만 예 교수팀은 영상변환 기법 중 하나인 ‘웨이블렛(wavelet)

변환’을 인공지능 기술 중 하나인 딥러닝과 접목시켜 새로운 알고리즘을 개발, 저선량 CT에서 발생하는 독특한 영상왜곡과 화질저하 문제를 해결했다.

예 교수팀은 이번 연구를 통해 정상 엑스선 촬영조건(10mSv)을 4분의 1로 줄인 저선량 촬영조건(2.5mSv)에서도 신체 내부 장기에서 암의 전이를 정확히 찾아낼 수 있는 고품질의 영상복원이 가능함을 확인했다.

예 교수팀은 최근 미국 의학물리학회(AAPM)에서 주최한 국제 저선량 CT 영상 획득 워크숍에 참가해 103개 팀 중 2위를 수상하기도 했다. 이 대회는 CT촬영에서 방사선 피폭을 줄이면서도 진단의 정확도를 유지하는 알고리즘을 경쟁하는 대회다.

한편, 이번 연구는 미래부 기초연구사업(개인연구) 지원으로 수행됐다. 연구 결과는 이 분야 세계적인 저널인 메디컬 피직스(Medical Physics) 저널에 게재될 예정이다. /뉴시스

## “팝업창 뜨고 계좌정보 요구 맨 보이스포싱”

### 금감원, 피해예방 10계명 안내... 자금이체 요구하면 의심해야

금융감독원은 보이스포싱 피해예방을 위한 10가지 요령을 18일 안내했다.

전화로 정부기관이라며 자금이체를 요구하면 일단 보이스포싱을 의심할 필요가 있다.

경찰·경찰·금감원 등 정부기관은 어떠한 경우에도 전화로 자금이체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를 요구하지 않는다. 특히 범죄에 연루됐으며 금융거래 정보를 요구하거나 안전조치 등을 명목으로 자금이체 등을 요구하는 경우는 100% 보이스포싱이다.

전화 또는 문자를 통한 대출광고는 대출방자형 보이스포싱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연락을 받은 경우 반드시 금융회사의 실제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대출을 권유하는 자가 금융회사 직원인지 또는 정식 등록된 대출모집인인지 여부 등도 점검해야 한다.

채용을 이유로 계좌 비밀번호 등을 요구하는 경우도 보이스포싱의 대표적인 사례다. 급여계좌 등록은 실제로 취업된 후

에 이루어지는 것으로, 본인 명의 계좌번호만 알려주면 된다.

대출 처리비용 등을 이유로 선임금을 요구하는 사례도 조심해야 한다. 금융회사는 전산비용, 보증료, 저금리 전환 예치금, 선이자 등 어떠한 명목으로도 대출과 관련해 임금을 먼저하라고 요구하지 않는다.

저금리 대출을 받기 위해서는 고금리 대출이 필요하다며 접근하는 사기범도 있다. 대출금 상환시에는 해당 금융회사의 계좌가 맞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인터넷 포털사이트에 접속할 때 보안관련 인증절차를 진행한다는 내용의 금감원 팝업창이 뜨면 의심해야 한다.

이밖에 금감원이 알려준 10계명에는 ▲가족 등 사칭 금전 요구시 먼저 본인 확인 ▲출처 불명 파일·이메일·문자는 클릭하지 말고 삭제 ▲낯치·협박 전화를 받는 경우 자녀 안전부터 확인 ▲피해발생시 즉시 신고 후 피해금 환급 신청 등이 포함됐다. /뉴시스

## 불법 사금융 피해 50억 넘으면 ‘최대 무기징역’

### 현행 5000만원 → 수익·손실액 ‘최대 3배’ 까지 벌금... 연말께 국회 제출

#1. C동 주식부자로 알려진 개인투자자 A씨에 대해 검찰이 장외주식 부정거래 의혹 혐의로 수사에 착수했다.

A씨는 유료 투자자를 모아 허위정보를 전달하고 장외주식을 비싸게 팔아 거액의 부당이득을 챙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특히 A씨는 부정거래 과정에서 원금보장 등을 강조했고 주식투자자 고가의 스포츠카를 샀다는 식으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알려졌다.

A씨의 부정거래로 손해를 본 피해자들은 1000명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된다.

18일 금융위에 따르면 신종 금융기법 발달로 P2P나 클라우드 펀딩, 가상화폐 투자 등을 가장한 유사수신행위부터 비상장 주식 및 펀드 사칭 등 유사수신행위도 진화하고 있다.

유사수신행위란 금융회사가 아닌 개인 등이 고수익·원금보장 등을 약속한 뒤 온·오프라인을 통해 불특정

다수로부터 자금을 모집해 피해를 유발하는 불법 사금융 행위를 뜻한다.

유사수신행위 신고접수는 ▲2013년 83건 ▲2014년 133건 ▲2015년 253건으로 증가했다. 올해는 7월 기준 348건으로 이미 지난해 신고건수를 넘어섰다.

신고가 늘고 있지만 이들에 대한 처벌은 미미한 수준이다.

유사수신행위로 부당거래를 한 자들은 현재 ‘유사수신행위의 규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처벌된다. 수위는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 또는 손실액과 무관하게 5000만원의 벌금 수준이다.

금융위는 우선 위법행위로 얻은 이익액에 따라 벌금을 차등할 방침이다. 처벌 규모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위반에 준할 정도로 강화할 예정이다.

이 법에 433조에 따르면 부정거래로 회피한 손실액의 1배 이상 3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며 규모가 5000원을 넘어설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한다.

금융위는 올해 10월 개선방안을 마련해 발표한 뒤 11월 유사수신행위규제에 관한 법률안개정을 준비한 뒤 연말께 국회 제출 방침이다. /뉴시스



## 한 분 한 분의 마음에 행복을 꽃피우는 금융생활의 따뜻한 동반자

기다리던 봄, 설렘 가득한 마음 곳곳에 행복이 전해지도록 전북은행이 따뜻한 햇살을 비추어 드리겠습니다

**지역사회/공익**  
지역사회 발전 및 공익을 위한 나눔 실천

**서민지원**  
저소득층 가정 및 사회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학술/교육**  
무한한 가능성을 지닌 인재양성을 위한 지원

**체육증진**  
문화단체 및 지역민의 다양한 체육행사 지원

**환경**  
자발적인 참여를 통한 환경보호 활동

